

제4기 ('06.5~'08.5)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전과 활동방향

-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2006. 5. 2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보고순서

**I**    **현황 및 여건진단**

**II**    **성과 및 평가**

**III**    **활동목표 및 추진체계**

**IV**    **3대 전략 추진과제**

**I**

**현황 및 여건진단**

**II**

**성과 및 평가**

**III**

**활동목표 및 추진체계**

**IV**

**3대 전략 추진과제**



대통령저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현황 - 지속가능발전 현주소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과거

현재

미래



- 경제성장에 비해 환경보전과 사회통합은 상대적으로 취약

## 경제

GDP규모 9위  
1인당 GNI  
19위(2만불)

## 사회

빈곤율 12.7%('96) →  
17%('00), 국민 90%  
빈부차 심각 인식

##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1위,  
유아 4명중 1명  
천식·아토피



-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  
- 미래 국가발전전략

## 기회요인

### ●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 확산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시민환경연구소, '05) :  
환경요인(89%), 경제요인(84%), 사회요인(83%)

### ● 지속가능성이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등장

-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 통상협상에서 환경과 무역연계 쟁점 부각

### ● 21세기 메가트렌드 - 지속가능발전

- '02년 WSSD에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채택

## 위협요인

### ● 경제·사회·환경적 여건 불리

- 고령화·양극화·농촌 공동화 확대,  
집약적 국토이용 및 개발압력 증대

### ●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경제사회 구조 및 대량소비 문화 여전

- 에너지원단위(TOE/천\$ GDP, '03) :  
한국 0.303, OECD 평균 0.19

### ● 기후변화협약 발효('05.2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압력 증대

●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미래 발전모델 정립 요구 ●

## 발전 과정

- **국민의 정부 (도입단계) : 환경과 개발의 조화**
  - 환경중심의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발표('00.2)
- **참여정부 (형성·확산단계)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발전**
  - 경제·사회·환경을 함께 고려한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발표('05.6)

### 도입단계

1·2기 ('00.9~'03.6)

- 정부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및 의제21 실천계획 도입
- 10개 정책부문에 대한 부처별 발전전략 수립

### 형성단계

3기 ('03.12~'05.12)

- 대통령 직접자문을 통한 국정자문기구로 기능 강화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범부처적 분야별 전략 수립

### 확산단계

4기 ('06.5~'08.5)

- 국가비전과 전략의 구체화, 이행·평가시스템 확립
- 거버넌스 및 공론화 활성화로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확산

**I**

현황 및 여건진단

**II**

성과 및 평가

**III**

활동목표 및 추진체계

**IV**

3대 전략 추진과제

# 성과 ('03~'05) – 6대 로드맵 국정과제는 마무리단계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발표('05.6)
- 연안·해양, 물, 국토, 에너지, 교통 등 핵심분야 발전전략 마련
  - 연안·해양 통합관리, '물관리기본법' 제정, 국토이용·보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목표설정 등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국회계류중)
- 갈등예방을 위한 10개 개발관련 법률 정비방안 마련
- 대안적 갈등관리 프로세스 개발 및 한탄강댐 갈등조정 추진

##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8개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 전력수급 기본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미약

■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정부의지 및 시스템 미흡

■ 부처별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으로 인식 여전

■ 인식은 확산, 대응 노력은 아직 불충분



- ➔ 국가비전이 선언되고 사회적 논의구조를 통한 의제화는 성과가 있었으나, 실제 정책으로의 연계와 실행에는 한계
- ➔ 참여정부 국정과제위원회로서 거버넌스 역량을 최대한 발휘, 사회 전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확산에 적극적인 역할 필요

**I**    현황 및 여건진단

**II**    성과 및 평가

**III**    **활동목표 및 추진체계**

**IV**    3대 전략 추진과제

# 활동목표 및 3대 전략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전략1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구체화 및 실천

〈활동목표〉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거버넌스 역량 강화 및  
공론화 활성화

전략2

전략3

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 구축

# 추진체계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 종전

- 정책자문기능 + 갈등조정기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총 80인 이내로 구성  
(직능대표 29명, 지역대표 48명)

## 개편후

- 정책자문기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총 35인 이내 (정부위원 12명, 위촉위원 18명)
- 갈등조정기능 :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총 70인 이내 (위촉위원 18명, 시도대표 48명)

### 개편 배경

- 정부부처와의 협의·조정시스템 강화로 정책화 능력 제고
- 정책자문과 갈등조정기능 분리로 전문성 강화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
- 지속가능발전 이행전문위원회 신설로 이행·평가 시스템 구축 추진

## 본 위원회

###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사회건강전문위

국토환경전문위

에너지산업전문위

지속발전이행전문위

#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 배심원적 기능을 통한 공론화 및 정책자문안 제시

- 공론화와 합의 형성이 필요한 정책현안
-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갈등사안

- 사회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갈등사안별로 전문가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현장조사, 갈등영향 분석 등을 통해 갈등조정특위의 배심원적 기능 지원

- 갈등특위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자문안 결정



-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5~6월)
- 새로운 지자체장·지방의회가 시작되는 7.1일 이후 위촉 (9월 출범)

**I**    현황 및 여건진단

**II**    성과 및 평가

**III**    활동목표 및 추진체계

**IV**    3대 전략 추진과제

# 3대 전략 추진과제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 21세기 선진국가

경제·사회·환경  
균형발전

현세대·미래세대  
공동번영

### 전략1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구체화 및 실천

### 전략2

거버넌스 역량 강화  
및 공론화 활성화

### 전략3

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 구축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구체화 및 실천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 6개 분야 48개 과제에 대한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주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 연안·해양 및 에너지분야 등 전략과제 구체화
  - 지속가능한 하구환경관리 및 하천복원방안 마련
  - 대기-교통-에너지 통합수요관리정책 및 자원순환형 산업정책 수립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확립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등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
  - 국토이용·보전 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정부사업 연계 등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이행계획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분야 (6개)	이행계획 정책과제 (48개)	관련 부처 (22개)
1. 빈곤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경제활동 증진 및 정책의 성별영향평가</li> <li>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li> <li>도시빈민 생활환경개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10개</li> </ul>
2.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체계 확대</li> <li>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확립</li> <li>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전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8개</li> </ul>
3. 자연자원 기반 보호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li> <li>수자원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체계 확립</li> <li>연안·해양 통합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li> <li>기후변화대응, 오존층 보호, 사막화방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11개</li> </ul>
4.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통상부 등 4개</li> </ul>
5.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과 환경연계성 평가</li> <li>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대책 강화</li> <li>공공보건의료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li> </ul>
6. 이행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등관리체계 구축</li> <li>공적개발원조의 확대와 질적 개선</li> <li>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교육 확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9개</li> </ul>

(분류기준 : 2002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결의)



## 거버넌스 역량 강화 및 공론화 활성화

### ■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사회-환경정책의 통합성 제고

-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 취약계층 환경보건 증진,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방안 수립 및 추진

### ■ 사회 공론화 및 합의기능 강화

- 주요 국책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및 갈등관리 프로세스 연구
- 연안매립 등 국가 및 지역의 정책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정책자문 활성화

### ■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기업-국회-정부간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모델 제시

## 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국가·지자체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세부 지표개발중
  - 생활환경, 건강, 자연생태, 연안·해양, 수자원, 에너지, 교통, 토지이용, 농업 등
- **지속가능발전 이행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지속가능발전 이행 촉진을 위한 기본법률' 제정 등 제도화방안 공론화 추진
  - \* WSSD 이행계획에서 권고('02),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안('03)



“우리의 목표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입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삼각의 축으로 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중에서

노무현

국민

기업

정부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는

**P : 한발 앞서** (Proactive)

**C : 변화하고** (Change)

**S : 한발 빠른** (Speedy)

**D : 행동으로** (Drive)

참여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내재화 함으로써 미래희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